

“행불자 단 한명이라도 찾아 내년 설엔 가족 恨 풀어주고 싶다”

5·18진상규명조사위 송선태 위원장의 설날 다짐

행불자 찾기는 진상조사의 출구...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유골 발굴 사병부터 조사하면 전두환 이어질 것... 40주년 맞아 진실 꼭 밝힐 것

“5·18 행방불명자 중 단 한명이라도 찾아내 내년 설에는 한 가족이라도 마음 편하게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송선태(사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2020년 설 명절을 맞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사라진 행불자들의 흔적을 찾아 그 가족들의 맺힌 한을 일부라도 풀어 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송 위원장은 “5·18행불자는 분명히 5·18 기간 전에는 광주에서 생존해 있었고, 5·18기간이 지나고나서 광주에서 부재가 증명이 된 사람들”이라면서 “유골을 찾아

DNA만 채취한다면 현재의 과학적 수준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엔가 묻혀있을 유골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일부 행불자 가족은 생존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흔적 찾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 관련 행불자나 암매장 문제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5·18을 완전히 해결했다, 진상조사를 완전히 끝마쳤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행불자 찾기는 진상조사의 출구에 해당하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립 5·18민주묘지가 이를(행불자문



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과 요구”라는 생각이 든다는 송 위원장은 “무명 열사의 묘에는 시신은 있지만 이름이 없고, 행불자의 묘역에는 이름은 있으나 시신이 없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진상조사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고 반문했다.

그는 이러한 행불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겠지만 이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송 위원장은 “40년의 세월이 지나 지형도 바뀌고 도시개발로 인해 도로가 신설되고 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행불자 유골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1980년 6월 광주에 투입됐던 사체처리반 활동을 한 공수부대를 심층 조사하고, 현재까지 제보된 72곳의 암매장제보지에 대한 개별적 예비 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전남대 법의학고 실을 비롯한 고고인류학자·법의학자·역사학자 등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전문위원을 자문을 꾸리는 한편 상시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준비팀도 갖출 것이라며 구체적 계획안도 내놨다.

그는 “40주년을 맞는 올해 행불자 문제를 비롯한 5월 당시의 모든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진상조사의 입구에 해당하는 신군부의 집권음모를 파헤치고 당시 광주 진압작전 실상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해 발표명령과 지휘체계도 반드시 밝혀내겠다”면서 “위에서부터 조사가 아닌 밑부분인 사병들부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병들이 있던 부대의 이동경로, 주둔지, 작전 내용들을 파악하면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사망자·부상자·행불자도 어느 정도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5·18 진상조사위의 진상조사 활동에 있어 양심적 증언 부족·애국조사인력의 부족 등을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당시 사망자·민간인 학살·암매장·제보지·성폭력 피해 사건들만 합쳐도 조사대상이 수백가지인데 실제 조사를 행하는 조사관은 34명 뿐”이라면서 “40년이나 지난 이제는 5월 당사자들이

사의 진실을 다 말할 때다.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적 동의를 통해 그들이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전두환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당대 최고 실권자였고 최고 책임자였던 전두환은 아래로부터 올라가 다보면 반드시 만날 수 밖에 없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입증만 해낸다면 새로운 기소가 가능하고 공소시효가 배제돼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악행에 대한 고백은 선행의 시작이다”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5·18 고백운동의 가능성을 전두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1980년 5·18직후에 어쩌지 못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광주는 용서하는 하도 잊지는 말자”고 했다. 그후 세월이 40년이 흘렀다면서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이 기회를 국민과 하늘이 줬다고 생각하고 분골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통상임금 산정, 근로자에 유리하게 판례 변경

대법 “연장·야간근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 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가산율(150% 이상)을 연장·야간근로 시간 계산에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유발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기존 판례가 8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법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약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자체로 계산해야 한다”며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따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B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 “기본시급 및 일당만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뿐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 고정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 등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본래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주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총 근로시간을 어떻게 따질지가 쟁점이 됐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총 통상임금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에 ‘분자’인 통상임금이 클수록, ‘분모’인 총 근로시간이 작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2012년 선고됐던 기존 판례는 ‘야간·연장근로 1시간’을 통상임금 계산 시 ‘1.5시간’으로 쳐왔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오후 10시~새벽 6시)·연장·휴일 등 근무를 할 경우엔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규정을 근로시간에도 적용해온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셈”이라며 “이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야간·연장근로 1시간’은 ‘1.5시간’이 아닌 ‘1시간’으로 수정함으로써 통상임금 계산식의 분모를 줄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근거 없이 연장·야간근로 1시간을 1.5시간으로 처리해서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게 계산돼온 관행이 개선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철도 안전 캠페인 22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 코레일 광주본부 직원들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철도교통 대국민 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중근 부영 회장 2심서 법정구속

횡령·배임 징역 2년6개월 실행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김세종 송영승)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행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기소됐지만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민간공원 특례 의혹’ 정종제 부시장 등 4명 재판 당시 평가위원 “공정 심사 할 수 없었다” 증언

22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법원 404호 형사법정에서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운영열 시 감사위원장, 이정삼 전 시 환경생태국장, 양병욱 공원녹지과 사무관 등이 피고인으로 참석해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특례 의혹을 다루는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민간공원 제안심사평가위원이었던 대학교수 A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증인 신문은 정 부시장 등 피고인 4명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고, 정종제·운영열·이정삼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양병욱측 변호인은 광주시의회 의장에

게 평가보고서를 건네준 행위에 대해선 인정한 반면 보고서 유출이 우선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내부 기밀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선 A교수는 “광주시가 제안심사위 1차 회의에서 감점기준을 변경하고, 2차 회의에서 업체명이 표기된 평가 기준서를 자료로 내놓는 바람에 평가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었다”면서 “특히 광주시 고위 공무원인 정종제 부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심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도 이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친 사망 신고한 30대 경찰 앞 횡설수설...필로폰 투약 ‘들똥’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찰에 동거녀의 사망 신고를 한 30대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철창 행.

○...2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37)씨는 “화장실에서 여자친구가 자살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 앞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집안에 낳은 필로폰이 발견되는 바람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자친구는 화장실에 숨겨있었으며, A씨는 방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서 “A씨에 대한 간이마약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구속한 뒤 필로폰 구입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